

안정에 방점 변화 최소화... 中企 중심 상생경제 '일자리 늘리기'

정부조직개편 내용과 의미

정부와 여당이 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국정운영의 안정을 위해 개편을 최소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안이 이처럼 '국정 안정'에 방점이 찍힌 것은 보궐선거를 통해 갑자기 들어서면서 인수위원회도 꾸리지 못한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를 할 경우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박근혜 정부가 초기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무려 52일을 흘려보내면서 국정에 발목을 잡힌 데서 교훈을 얻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야당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최소화한 채 출발하도록 한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대표적 내용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부에 존속시키기로 한 것이 꼽힌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통상 기능을 이관하면 업무에 혼란이 올

文대통령 공약 배치 불구

통상 기능 산업부에 존치

내년 개헌 논의와 함께

대대적 개편 진행될 수도

수도 있는 만큼 산업부에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물론 산업부에서 몇 가지 기능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하고, 통상 기능마저 외교부로 이관하게 되면 산업부 자체가 왜소화하는 부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해 외교교통상부를 부활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된 것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이처럼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와중에도 문 대통령이 국정 과제인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한 공약들은 반영됐다.

우선,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을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하고 재난 관련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통합하고 재난 정책을 총괄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 본부를 설치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지자체와 경찰·소방·해경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대응 시 지휘·보고체계를 단일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핵심 공약인 '좋은 일자리 늘리기'에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온 것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중심의 상생경제구조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부 신설 등도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이 수자원 정책을 일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따라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각종 감독·정책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시에는 변화를 최소화했지만 국정이 안정되면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에 필요한 본질적 개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에) 개헌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개헌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 등 급박한 현안이 마무리되면 참여정부 때처럼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보내 '외교통상부'로 재편하는 등 큰 폭의 정부조직 개편이 있을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수정된 또 다른 부분은 경호실을 청와대 조직으로 남기되, 경호실의 명칭을 경호처로 변경하면서 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하향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대통령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에 경호국을 신설하는 것을 공약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이 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신설부처 및 기능 변경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국정기획위 로드맵 만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장 피해와 관련, "이들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노동계 위원이 전원 사퇴했기 때문"이라며 "국정기획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복원돼 가동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원만하게 푸는 것이 우리 경제를 도약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고 있다"며 "얼마든지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 위원 중 노동계 측 위원인 근로자위원 9명은 지난해 7월 자신들이 모두 불참한 상태에서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정해진 데 대해 항의의 뜻으로 전원 탈퇴를 선언했으며 현재까지 회의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위원은 정권 교체 후인 지난 1월 2차 전원회의에도 모두 불참했다.

문 대통령과 대선 당시 정책협약을 맺은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 복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노총에 배정된 최저임금위 위원 교체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면서 도청과 대외의 노정(勞政)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한 최저임금위와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대화 채널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들은 최근 노동계 인사들을 만나 국정기획위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재난안전조직 박근혜 정권 이전으로 원위치

세월호 참사로 탄생 안전처

2년 반만에 간판 내리고

행정부 명칭 행안부로 변경

5일 발표된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2년 반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새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안전처의 소방업무는 '소방청'으로 분리되고, 해양사무 중 경비·안전·오염방제·해상사건 수사기능은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한다.

나머지 안전처의 기능은 행정자치부로 통합한다. 이와함께 부처 명칭도 '행정안전부'로 변경된다.

이와는 별도로 차관급 기관인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새로 설치해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한편 재난 관련 기관 간 원활한 협의 등을 위해 재난안전조정관 직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의 주된 배경으로 정부의 미숙한 대응

이 도마 위에 오르자 '재난안전 콘트롤타워' 격인 국민안전처를 그해 11월 신설했다.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해체한 해양경찰청의 기능은 안전처로 편입됐다. 당시 소방기능도 흡수돼 안전처의 한 축을 구성했다.

하지만, 새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소방과 해경, 안전기능을 포괄했던 정부 조직은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사실상 환원된 형태를 갖추게 됐다.

소방과 해경은 각각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의 직할부대로 바뀌게 됐다. 따라서 안전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박근혜 정부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의 행안부 명칭이 부활하면서 '도로' 행안부라는 말도 나온다.

그간 안전처는 재난안전 콘트롤타워를 자임하면서 대령 재난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현황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재난관리 책임이 있는 해당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업무가 중복된 점도 안전처의 존립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고민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 방

향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정부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분리하는 배경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력을 강조하면서 간소화된 보고체계, 현장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꼽았다.

안전처의 안전기능을 행정안전부로 통합하는 것도 재난 대응의 실질 주체인 지자체와 재난안전 총괄부처 간 협력과 연계를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전처 내부에서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놓고 희비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그간 별도 청으로 독립하기를 희망했던 소방업무 부서에서는 소방청 신설을 놓고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업무 성격이 다른 안전이나 재난 업무가 행정안전부 관할로 넘어가는 것에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반면 해경 쪽에서는 별도 청 신설은 반기면서도 해수부 산하로 편입되는 것을 놓고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해양수산 정책을 장려하는 해수부와 이를 규제하는 해경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일보 65 광주일보 연속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불받아요!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비용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비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비용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용량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된 제품(이전) 보증금 적용	2017. 1. 1. 부터 출고된 제품(이후) 보증금 적용	비고
재활용병 사용량 제17조(2)호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마-라미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청주 등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환경부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 보해양조